

월/요/광/장

이상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1997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철씨는 특별사면을 받은 후 2002년 마산지방법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다가 정계진출의 꿈을 접었다. 또 2004년 4·15 총선 때는 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가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후보등록을 포기했다. 현철씨는 2004년 9월에는 한솔그룹 전 부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과 벌금 4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는 2002년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과 벌금 4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홍업씨의 범죄사실은 현대와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았고, 또 다른 기업들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사 무마 등

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5억8천만 원을 받는 등 합계 47억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업씨는 2003년 5월에는 한국전력에 석탄을 납품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위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3억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사실상 이씨 지지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현철씨의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업씨는 4·25보궐선거 무안·신안지역 민주당 후

김현철과 김홍업

보로 공천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한 아들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말로 유권자의 동정심을 자극하면서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홍업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구속, 연금 등을 보면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홍업씨는 대통령 아버지를 둔 덕도 충분히 봤다.

그가 대통령 아들이 아니었다면 기업들이 5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겠는가. 드러난 혜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또한 큰아들 홍업씨가 아버지 덕에 이미 3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논리에 의하면 현철씨의 출마도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동정받아야 한다. 홍업, 홍업씨에 이어서, 기업에서 수습이 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사실상 이씨 지지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현철씨의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업씨는 4·25보궐선거 무안·신안지역 민주당 후

어디 가담한 말인가. 두 김 전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정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분들이다. 또한, 이분들은 아버지 집권 당시에 속칭 '소통령', '홍삼(홍일·홍업·홍걸)트리오'로 불리다가 집권 말기에 구속되어 심각한 레임덕을 초래하였다. 이들의 부정부패는 수구세력의 손에 공격의 창을 쥐어준 셈이 되었다. 그 피해는 민생개혁세력 전체에게 미쳤다. 홍업씨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의 위상과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전남의 명예와 자존심을 크게 손상할 것이다. 그 피해는 또다시 평화개혁세력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헌금과 줄세우기로 상징되는 구태정치체를 하다 2003년 민주당 정풍운동 과정에서 퇴출당한 세력이 홍업씨 당선을 통해 복귀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사·도민의 뜻을 만드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홍업씨 본인도 결단의 순간에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하였던 현철씨의 선례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세계박람회 여수 실사 국민 역량 모으자

세계박람회사무국(BIE) 대표단이 9일 한국을 방문, 2012 세계박람회 유치 일 한국을 방문,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여수시에 대한 현지 실사에 들어간다. 정부 차원에서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찰'을 치르는 것이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해내겠다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유치 열기는 뜨겁다. 오는 11일 여수 현지에서 실사를 벌이는 실무단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진한 감동'을 안겨줄 계획이다. 여수는 실사기간 시민들의 유치 열의를 담은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이게 된다. 자신감도 넘쳐난다. 여수는 201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지난 2002년 중국 상하이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 만큼 '두번의 실패는 있을 수 없다'며 땀을 뽀뽀한다. 하지만 세계박람회 유치를 낙관하기엔 이르다. 여수는 모로코 탕헤르 및 폴

란드 브르츠와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도시 모두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의 효과는 엄청나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대회기간이 3개월에 달한다. 산업연구원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그 효과가 생산유발 10조3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1000억원, 고용유발 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중앙 및 지방유치지원위원회, 전남도, 여수시 등은 실무단에 대한 준비비를 모두 마쳤다.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는 일만 남았다. 전 국민이 역량을 모아 실무단에 깊은 인상을 심어줘야 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 얼마 전 육상 불모지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권을 따낸 패거리를 여수가 다시 한번 이루어내길 기대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공동대응 나선 비수도권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서 수도권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6일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강총량 규제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현행 200㎡에서 100㎡로 하향키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주요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관리'라는 국가균형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허구일 뿐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어느

기업이 기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방에 투자하겠다는가. 오히려 지방보다 더 수도권 집중을 불러올 지방경쟁에 맞서 수도권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6일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강총량 규제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현행 200㎡에서 100㎡로 하향키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주요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관리'라는 국가균형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허구일 뿐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어느

법조칼럼

김태철



남이 하면 볼품,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현상을 보거나 생각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인간을 비난하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할 듯싶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리한 요구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자연스럽게 상수

시대의 대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세를 거부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왜 이런 사기범을 구속하지 않느냐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고소인들은 한결같이 피고소인들을 필히 구속하여 법에 처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라고 요구한다. 왜 저런 사기범을 구속하지 않느냐면서 수사기관에 삼하게 항의를 하기도 한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일까? 대다수 국민들이 불구속수사를 원하는데 왜 고소인들은 한결같이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것일까?

입장의 변화, 의견의 변화...

리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잠자는 스님도 운전대만 잡으면 금방 그렇게 된다. 저 인간 깡박이도 안 놓고 깨어든다. 기어기러면 걸어가자 뭐 하러 차를 끌고 나왔느냐니 하는 등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온갖 상소리로 그들이 비난받아야 할 정도를 넘어서 거의 죽일 인간의 반열에 올려버린다. 그런데 그 욕심을 하는 사람들의 운전행태를 보면 그들 또한 똑같이 죽일 인간의 반열에 충분히 들고도 남을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일까. 대부분의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강제수사에 반대한다고 하며, 특히 구속수사에 대하여 거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불구속수사 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사례들은 입장의 변화에 따른 의견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리한 요구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믿는다.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속된 말로 속이 보일 정도로 변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다고 한다. '의견의 차이가 원칙의 차이는 아니다 (Every difference of opinion is not a difference of principle)'라고. 선거에서 난무했던 의견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원칙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했던 말로 보이는데,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다. 입장의 변화에 따라 의견을 바꾸고 그에 따라 원칙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하자는 말이라고. <광주지검 형사 제2부 부부장검사>

기고

이권배



항만교통관제실은 항만 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을 유도하고 선박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오늘도 광양항 관제실 소속 21명의 관제사들은 365일 24시간 근무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13일과 3월28일에는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임·출항 선박들의 항해에 지장을 주는 어선들의 집단행동(시위), 이에 대처하는 해경정, 그리고 LNG운송선박이 부두에 진입하지 못하고 항로상에서

LNG선박 안전운항에 관한 세미나에서 필자는 "여수·광양항은 20여 년간(GS 부두 준공이후)위험물수송선박에 대한 위험대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몰류화전이 가장 신속한 여수·광양항을 언제든 찾아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항로상에서 어선시위에 회항이라는 낯 뜨거운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각급 기관장님을 비롯한 항만화물 유치 관계자들은 오늘도 광양항 홍보와 화물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상 집단행동 엄청난 재앙 불러온다

회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되고 광양항 2, 3항로로 진입하던 일부 선박들이 항로상에서 시위선박(어선)에 의해 정지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역어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벌어진 이 해상시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선박근무자에게는 노동쟁의권도 제한되어 있으며, 해상에서의 집단행동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를 생계삼아 살아가시는 어업인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시위)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남 남해 리조트에서 열렸던 외국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데, 찾아오는 선박을 항로에서 되돌려 보내는 횡령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외국선박 관계자들 눈에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빠른 물류의 흐름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발전과 직결된다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어려움 문제라도 항로를 침범,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고 광양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광양항의 도약을 위하여 밤새워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을 주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어업인여러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장>

함께 걸으며 우정 나누던 소풍의 참 의미 사라져

대부분의 학교가 소풍의 본래 취지인 야외환경학습, 자연관찰, 체력단련은 외면한 채 일정한 장소에 집결해 출석을 점검하고 잠깐 자유시간을 주었다가 도시락을 먹고는 해산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은 그저 '하루 수업 않고 쉬는 날'로만 인식하고 있다. 60, 70년대 소풍은 원숙(遠足)이라 하여 자연을 벗헤 야외관찰을 하면서 급우들과 오순도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 거리를 걸곤 했다. 요즘 소풍은 차라리 집결지에 모여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고 노래자랑·장기 자랑을 벌이다가 오후 1, 2시만 해산해 버린다. 일찍 소풍행사를 마친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영화관에 가거나 전자오락실과 유흥장에 가기도 한다. 교사들도 모여 회식을 하고 일찍 마치려 하니 소풍의 원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보다 유익하고 알찬 행사계획을 세워 실행한다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의 쓰레기나 휴지, 버려진 캔이나 병,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는 봉사활동도 벌이면서 자연보호에도 동참한다면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저 하루 즐기고 노는날에서 야외학습의 진정한 효과가 있는 소풍날이 되도록 학교측의 충분한 사전계획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우정열·광주시 서구 화정동

無等鼓

널리 알려졌듯 호남 비하의 단초는 고려 왕건의 훈요십조에서 비롯됐다. 훈요십조 8조에는 '차령 이남과 공주강 밖은 백역의 형세를 보이니 그 지역의 인재를 등용하지 말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훈요십조의 이 조항은 조작됐다는 것이 요즘 학계의 정설이다. 고려 7대 왕 현종을 옹립한 최충 등 신라계가 백제계통을 제거하기 위해 왕건의 유혹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훈요십조가 역사에 등장한 것이 현종 때이고, 고려 초 호남인들이 대거 등용됐다는 점을 본다면 조작설에 더 힘이 실린다. 대표적 실학자인 이종환도 호남인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

기 위해 전국을 편력했지만 전라도 땅은 단 한 번도 밟지 않았다. 호남인 편견은 이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작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가 조영암은 1959년 잡지 '야담과 실화'에 실린 '하와이 근성 시비'라는 글을 통해 호남인을 비하했고, 소설가 오영수는 1979년 문학사상에 기고한 '특일고'를 통해 전라도인을 '표리부동하고 신의가 없다'고 썼다. 이 일로 조영암은 구속됐고, 오영수는 문인협회에서 제명됐지만 호남인의 상처와 분노를 그에 비할 수 없었다. 최근에 터진 강동인물이다. 이종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 중 '팔도총론'의 전라도편에서 '습속이 노래와 계집을 좋아하고 사치를 즐겨하며 사람이 경박하고 간사하다'고 말 시켰다. 그러나 이종환의 편견은 자신은 물론, 필부의 예의조차 관계된 자를 즉각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오주승 정치부장 js0h@kwangju.co.kr



확인도장 받기 급급한 학생 봉사활동 유감

알마전 관공서에 중고생 6~7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공무원에게 할 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봤다. 그 공무원은 옆에서 봐도 굉장히 바빠 보였는데, 느닷없이 찾아와 봉사활동 일거리를 달라고 하자 난감했는지 "인원이 너무 많고 오늘은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안 되느냐"며 마냥 버티고 서 있었다. 순간 그 직원이 이견 아니다 싶었는지 "봉사활동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증거제출용으로 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꼭

관공서가 아니라더라도 다른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을 가보는 것이 낫겠다고 타일했다. 학생들은 마지못해 들어갔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인가. 해당 기관 처지에서도 그냥 확인도장만 찍어주고 보내면 속편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현실을 타협하기 보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 그 공무원의 설득이 훌륭했고, 봉사활동에 대해 잘못된 인식하고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각이 필요하다. <박준용·목포시 옥암동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